

농산물 산지유통 고도화 방안 찾는다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업소득분과 포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업소득분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산지유통 고도화 방안'의 주제로 26일 전북 연구원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2023년 3월 29일 출범한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농정협치 기구로 총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포럼은 농업소득분과에서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농업네트워크, (주)한서아그리코, 전북연구원 등 산지유통 전문가와 현장의 농업인, 조합공동

사업법인 대표, NH농협 전북본부, 지역농협 및 시군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현욱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이사는 먼저 전북의 원예산업 현황과 전북 통합마케팅의 1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30개 품목 중 전국 생산비중 10% 이상 되는 품목은 16개 품목이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생산비중이 높은 농산물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북자치도가 높은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산·수급에 대한 불안정성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한 스마트팜 육성 등에 대한 생산기반 정책마련과 광역물류 체계 시스템 도입 등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효율화를 넘어 소비자의 니즈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들의 유기적인 연결관계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인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단위 농업경영체 공동영농 등의 모델

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산지유통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우리 도의 특색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포럼으로 산지유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전북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발제에서 언급된 중장기 과제와 전문가 토론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도 농산물 유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속가능 도시재생 사후관리' 전북자치도 정책세미나 개최

도·시군·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시민 등 80여명 참석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2시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도내 14개 시·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 도시재생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장민영 부연구위원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방안과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연구를 발제했다.

윤혜영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업 종료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향후 도내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거점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기능실정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발제 후 종합토론에서는 김혜천 목원대학교 명예교수와 김항집 광주대 교수,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거점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 중 거점시설의 운영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향후 도내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거점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베트남 우호 지역 공무원 10명을 초청한 뒤, 연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 우호지역 공무원 전북자치도에 모여

까마우성 실무공무원 전북 방문전 북 농수산, 생태보존 벤치마킹

전북특별자치도의 '친구' 베트남 다락성과 까마우성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전북자치도는 베트남 우호지역 공무원 10명을 초청해 24일부터 5일간 베트남 우호 지역 공무원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를 방문하는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농업·수산·생태분야의 실무담당자이다.

베트남 공무원들은 도내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도의 농업, 수산, 생태 관광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현장시설을 직접 시찰하며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북자치도의 우수한 선진 행정, 특히 농업분야의 사례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베트남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올해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베트남 측의 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베트남 우호지역이 전북자치도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농업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와 베트남 지역과의 교류는 2017년에 시작되었지만, 폭발적인 교류수요에 힘입어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다락성과는 2017년에 우호협약을 맺고 축제 기간 예술단 상호 파견, 한글학당 운영, 자동차기술연수생 육성, 청소년 교류, 계절근로자 도입,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다락성 기업 전시 참가 등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까마우성은 2019년부터 교류를 추진한 우호 지역이고, 행정, 문화에

술, 농업, 직업교육, 계절 근로자 도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를 추진하여 지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우호 지역이라는 안정적인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지방 국제교류의 역할이다"라며, "베트남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파트너 국가임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우호 지역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은 올해 6회째로 실질적 교류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자급 교류사업으로서 분야별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이를 기반으로 한 교류사업 발굴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이만호 기자

도, 유관기관과 협력

체납차량 근절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차량 통행이 많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속반으로 편성된 전북자치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북영업센터, 전주시 덕진구청세정과·산업교통과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영업소에는 긴장감마저 들었다.

단속 현장에는 각 기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들이 배치되었다.

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017년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근절뿐만 아니라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단속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과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총 13대 1천만의 현장 징수 실적을 올렸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지치행정국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을 전개해 가겠다"며 "성실납부를 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점 수질검사 추진

전북자치도, 7~9월 홍수·지진·태풍 자연재해 대비

먹는물 수질기준 총 46개 항목 및 우리눈 검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가오는 3분기(7월~9월)에 민방위 비상급수 중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추진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홍수,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전쟁 등으로 상수도 체계가 마비되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고자 설치한 급수시설로, 도내에는 총 243개소가 있으며, 음용수용으로는 10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일반 세균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3분기에는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

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 외에 방사성물질인 우리눈을 포함한 47개 항목 수질검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은 사용 중단 조치하고, 취수정 점검, 물품기 작업, 저수조·배관·수전 등에 대한 세척 등 수질 개선 작업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시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원활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